

# 부서지고 녹슬고... 흉물된 해양레저시설

### 도두동 사수항내 레저시설물 수년간 방치돼 눈살 제주시 2년전 원상회복 명령... "사업자 연락 안돼"

제주시내 한 항구에 설치된 해양레저시설이 운영 중단 후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지만 철거에 나서야 할 사업자가 종적을 감추면서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제주시 도두2동 사수항 한켠에는 길이 약 10m의 2층 규모 레저시설이 설치돼 있다. 시설물 대부분 부식이 진행된지 오래돼 검은 이끼와 거미줄이 끼어 있다.

시설물 주위를 두른 안전 철조망은 이미 뜯겨나간 상태다. 시설 내부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문은 위태로워 보였다. 1층엔 썩은 바닷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고 있고 2층엔 의자, 테이블, 냉장고, 소파 등이 뒤죽박죽 엉킨 상태로 쌓여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선박 내 구조물이 많이 부식돼 큰 사고를 일으

킬 수 있습니다. 해당 선박에 무단출입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종이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이 레저시설은 한 업체가 지난 2013년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점유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다. 이 시설은 '수중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수심 5~7m를 걷는 체험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돼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닷속을 걸으며 물고기에 밥을 주는 등 독특한 체험활동으로 입소문을 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현재 이 레저시설의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운영 업체도 폐업해 시설물만 같은 자리에 지고 있다.

해당 시설이 어항시설을 점유할 수 있는 허가 기간도 종료된 상태.



제주시 도두동 사수항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해양레저시설물. 강다혜기자

공유수면 등 국가어항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제주시로부터 '어항시설 사용 점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 측은 점유 기간을 늘려달라며 연장 신청을 했지만 제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연장 신청 허가 문제로 해당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지만 제주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지난 2018년 4월 이 업

체에 대해 원상회복(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제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당 시설 운영업체가 폐업한 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업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체납세금 6억8000만원 징수

서귀포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제주 체납 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세금 6억8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 체납 관리단'은 체납자 7680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변호판 영치 활동 등을 전개했다.

체납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방법을 안내했으며, 특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김도영기자



8월 첫 주말 해수욕장 폭염이 기승을 부린 8월 첫 주말인 2일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이 물려와 물놀이를 즐겼다. 이상국기자

## 제주시 고수온 피해 대비 예방활동 강화

제주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돼 인근해 해역 해수 표층수온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양식어장의 고수온 피해에 대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고수온에 대응이 취약한 양식장 23곳에 피해저감 물품(면역증강제) 보급과 10곳의 노후 양식시설에 대해 현대식으로 개선토

록 지원했다. 또 현장방문을 통해 피해예방 대응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고수온 피해가 우려되는 한경면 소재 양식어장을 방문해 해상가두리내 양식생물의 조기출하·이동 조치 지도에 나서고 있다.

고수온 특보발령시엔 관계기관 합동 현장대응반이 취약지역인 한경면

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수온 발생상황·대응방안을 SMS로 양식어가에 전송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또 현장대응반 운영에 따른 현안 사항 발생시 제주시가 주관하는 고수온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보완해 나간다고 밝혔다. TF는 제주도, 국립수산물연구원(제주수산연구소), 해양수산연구원, 행정시, 양식수협으로 구성된다.

문미숙기자

## ■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특별성명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철회하라"

### "특허 허용은 제주 현실과 소상공 어려움 무시한 처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는 지난달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성명을 통해 "중국어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신라, 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며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 상인회, 관광학계의 부정적인 견해와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면세점 1개소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로서, 중앙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제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의 소상공인들이 최근 나타난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로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써 제주의 민생 경제를 더 큰 회복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위는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 소상공 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역효과를 지닌 암(暗)을 필연적으로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축산악취·미세먼지 첨단장비로 잡는다

### 제주시, 분석장비 장착한 이동측정차량·드론 구입

제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 장착된 이동측정차량과 드론(무인항공기)으로 축산 악취와 미세먼지 등 고질적인 생활환경 민원 해소에 나선다.

시는 9억4500만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분석장비 장착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 첨단과학장비를 구입, 이를 활용한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스콘공장이나 양돈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의 민원처리에 장기간(민원접수→현장 점검→시료채취→오염도 분석) 소요되면서 생활환경 민원이 지연·반복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구입한 장비 활용으로 사업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까지 드론으로 시료 포집이 가능해졌고 차량에 장착된 분석장비를 이용해 미세먼지, 유해가스, 특정 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 물질 등도

현장에서 바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점검은 이동측정차량으로 민원발생 지역의 오염도 모니터링과 배출원을 파악한 후 무인항공기로 주요 배출원의 시료 채취, 현장에서 오염도 분석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이처럼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하고 오염도를 분석함으로써 지도점검의 효율성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무인항공기와 이동측정차량으로 분석한 자료는 행정처분 등의 공인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어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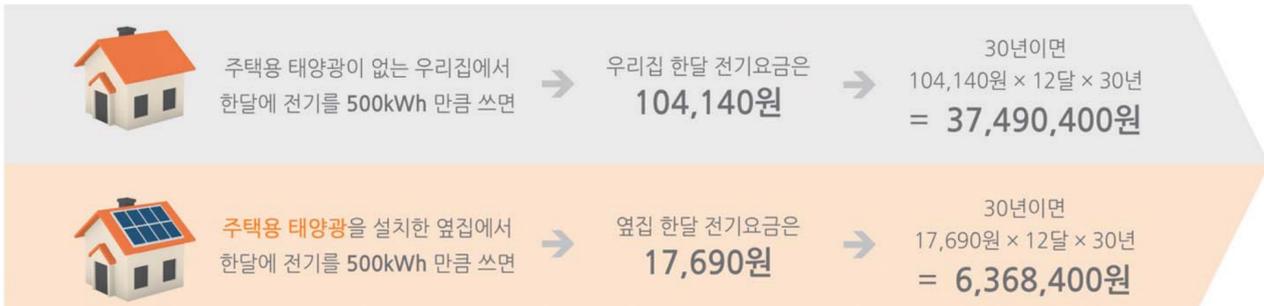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사업장 단속효과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옆집은 왜? 주택용 태양광을 달았을까요?



**아셨습니까?**

우리집과 옆집 30년 전기요금

**31,122,000원 차이**

그런데, 올해 태양광 보급사업에 신청해서 우리집에 설치하는데 드는 자부담금은

**249만원**

\* 위 내용은 주택용태양광 3kW 설치, 월평균 발전량 300kWh, 보통 주택용(저압) 한전 전기요금 기준으 계산되었고, 전기사용 패턴, 전기요금 제도변경 및 태양광모듈 경년감소율에 따라 절감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 보급사업 신청 "추가"접수중! 보조금 251만4천원 지원! 도내 최장기간 10년 무상AS 제공!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